

[기고] 농촌공간계획, 이제는 실행을 설계할 시간

[한국농어민신문]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한창이며, 일부 지역은 이미 시행계획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이 계획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수립과 이행 전반을 관통하는 출발점이 된다.

계획은 수립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는다. 실행되지 않는 계획은 결국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칠 뿐이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은 지역의 공간 구조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중장기 전략인 만큼, 계획 수립과 이행의 전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연결의 핵심에는 결국 ‘사람’, 즉 계획의 이행 주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참여 방식은 다소 제한적이다. 행정협의회와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설명회나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는 의미 있는 도구이지만, 표본 구성과 문항 설계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문(自問)해 보자. “누가 이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다양한 주체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이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참여시키며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계획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것이 지역 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다. 농촌 현장에는 농촌공간지원기관을 비롯하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활력플러스사업단 등 다양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설립 근거와 소관 부처가 다르지만, 동일한 시·군 단위에서 농촌주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활동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기능적으로도 농촌공간계획과의 접점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서비스 확대는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관된다. 농촌융복합산업과 일자리 창출은 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맞닿아 있으며, 읍·면 단위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는 도시재생 분야와 중첩된다.

이처럼 이미 현장에는 다양한 주체와 기능이 작동한다.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분절'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통합적·전략적 공간계획' 역시 이러한 연결을 전제로 한다. 계획이 통합적이라면, 실행 또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주체 간 협력을 넘어, 조직 간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산된 정책과 재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을 유도하는 '플랫폼형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농촌공간계획은 이제 '계획의 시대'에서 '이행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행력은 단순히 예산 규모나 사업 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함께 실행하느냐가 핵심이다. 계획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며,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 구조와 시스템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직,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다.